

“벼 이삭도열병 등 피해 농업자연재해로 인정을”

도의회, 김철수 도의원 발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전북도의회가 최근 전북도 전역에서 발생한 벼 병해충 피해를 ‘농업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재해대책 복구부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제8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철수 의원(정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벼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 피해 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6~8월까지 45일간 비가 내렸고 특히, 벼 알곡이 한창 영글어야 할 시기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 동안이나 비가 내리는 등 벼 출수기와 가을장마가 겹치면서 벼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이 창궐해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북도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 벼 재배면적 대비 벼 이



삭도열병은 31.3%(3만5,286ha), 세균벼알파름병 8.5%(9,611ha), 깨씨무늬병 6.7%(7,527ha)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1모작 농은 물론이고, 2

모작 논에서도 병해충이 잇따라 확산하고 있어 그 피해 면적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올해 벼 병해충으로 인해 벼 수확량이 예년 대비(538kg/10a) 5~8% 정도 감소하고, 원전미 비율이 크게 떨어져 수확량 감소 피해가 불가피하고 일부 농가는 수확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그간 전북도는 합동예찰, 공동 방제를 추진하는 등 병해충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고 대부분 농가들은 8월 벼 출수기에 맞춰 3회 이상 방제를 실시했으나, 급속히 번지는 병해충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벼 병해충 피해를 농업자연재해로 인정해 재해대책 복구비를 지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및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철수 의원은 “올해와 같은 가을장마나 잦은 비는 폭염, 폭우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임이 분명하다”며 “정부는 더 이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농민들의 몫으로 떠넘기며 절망적이고 애초는 농민들의 심정을 모른 척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이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게 전달해 전북도내 벼 병해충 피해 지역에 대한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5일 제885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 김승환 교육감과 도의원들이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지방소멸 막아야”

민주김윤덕 의원, 국토부 국감서 주장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이 5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절실함을 가지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날 노형욱 국토부장관을 대상으로 “국토연구원이 전국 7개 시·군·구를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자고 건의한 것”을 알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주무 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지금이라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과감히 시행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을 진행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고 지방에서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하면서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보, 교육의 질 개선 등 많은 부분의 노력이 수반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즉시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김윤덕 의원은 한 국토지주태공사(이하 LH)의 ‘사업조정을 위한 부서이전계획(2010. 6.1)’ 내부문건을 공개하고, “LH가 성남대장 지구를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459억 규모로 추정하고, 중장기 사업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LH 경기지역본부가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이 문건에는 시흥군자, 과천시지정 등 8곳은 조속추진사업 지구로 성남대장, 화성 비봉 등 7곳은 중장기 추진사업

지구로, 화성 장안, 용인모현은 사업취소 필요 지구로, 화성북동 등 3곳은 사업취소 원료지구로 분류했다.

또한, 화성비봉과 황해포송지구는 사업추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혀 있었다. 김 의원은 “이 문건대로라면 이제명 경기지사는 당초 LH가 예상한 대장사업 수익 459억원의 12배 규모인 5,508억원을 환수한 셈”이라며 “당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성남시의 준공영방식의 대장개발 협상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상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장 실무부서의 사업 필요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LH가 이 사업을 포기하고 민간에게 넘기려고 한 배경에는 현대건설회장 출신 이명박 대통령, 현대건설 사장 출신 LH 이지승 사장, 현대건설 상무부 출신 국회의원 신영수 삼각관대에 의한 작품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유호상 기자

“고향기부제 확산 동참해달라”

양성빈 전 도의원, ‘고향사랑 쉼터’ 제안

“고향기부제는 농도전북을 살리기 위한 진심입니다. 고향기부제 확산에 동참해 주세요.”

양성빈 전 도의원은 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쉼터’를 제안했다.

이날 양성빈 전 의원은 “제 고향 장수에 담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해보고자 지난 2016년 3월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며 “저의 6년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날 28일 국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가결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향기부금법은 거주지 외 지역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덕분에 지역 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면서 “제정이 열악한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지역 특산물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인정받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고향 장수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 고향기부제에 대한 연

구와 노력이 결국엔 대한민국 농업 수도를 주장하는 농도전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성빈 전 도의원은 “고향기부금법은 정치권의 노력이 병행되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안호영 의원, 한병도 의원 등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고향기부금법 통과로 지역활성화라는 과제해결의 첫 걸음을 내딛은 만큼, 이제 고향기부제 확산에 힘을 합쳐야 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쉼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 쉼터’는 지역 특산물 먹고 마시며, 고향을 홍보하는 영상 및 사진을 SNS에 공유하고, 지인들을 지병해 전국적으로 고향사랑을 확산하고자 제안하는 캠페인이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 반입 제강슬래그 원래 계획과 달리 시공

“심각한 환경문제 발생 중… 중금속도 포함돼”

최근 새만금에 반입된 제강슬래그가 원래 계획과 달리 시공돼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금속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에 반입된 제강슬래그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측정해 결과 생물이 살 수 없는 강알칼리성으로 확인됐다”며 “현장의 슬래그를 채취해 합당 분석도 진행한 결과 일부 중금속도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새만금에는 지난해부터 새만금 육상태양광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사 차폐용 도로 건설을 위한 보조 기층 재료로 제강슬래그 50만 톤이 반입되면서 환경단체와 업체가 유해성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공사 현장의 슬래그 침출수를 담고 밀봉한 유리병과 세종청사 인근 금강물에 담긴 유리병을 준비하고, 그 안에 미꾸라지와 금붕어를 넣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보여주며, 유해성 실험을 진행했다. 새만금 공사 현장에서 가져온 물 세 병을 각각 미꾸라지와 금붕어는 금세 물투박을 치며 거친 호흡했고, 윤 의원이 이 물에 pH 측정 장치를 넣자 강한 알칼리성 용액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10여 분이 지난 뒤 새만금 슬래그 침출수 속 어류는 곱질이 허얇게 벗겨지며 모두 폐사했지만

금강물에 담긴 어류는 생명이 지장 없이 그대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의원은 “제강 과정에서 들어간 다량의 석회석이 슬래그와 함께 섞여 쌓였다가 빗물에 씻겨 강알칼리성 침출수를 측정해 결과 생물이 살 수 없는 연구와 논문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며 “생물이 살 수 없는 이 물이 새만금 호수와 인근 바다로 흘러 들어가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될 것이 분명해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는 제강슬래그의 중금속 함유 여부와 관련,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2곳에 새만금 현장 슬래그 시료를 맡겨 시험한 결과를 공개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폐기물 공정시험기준 등에 따른 용출시험 방법을 진행한 국립환경과학원의 폐기물 검사에서는 바나듐, 몰리브덴, 아연, 알루미늄, 코발트가 검출됐고, 다른 중금속은 불검출로 보고됐다.

같은 용출시험 방법으로 분석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결과 역시 알루미늄을 제외하고, 시험 의뢰한 나머지 12가지 금속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험 방법을 습식분석 및 기기분석을 통한 합량분석으로 바꿔 진행한 한국세라믹기술원 시험

결과는 크롬, 알루미늄, 구리, 아연, 망간, 바나듐이 검출돼 실험 방법에 따라 검출되는 물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윤 의원은 “이번 시험 결과처럼 ‘불검출’이라고 해서 중금속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정량한계 이하의 미량이거나 실험 방법에 따라서 나타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새만금의 경우 50만 톤이나 되는 대량의 제강슬래그가 20년이 나 장기간 쌓여 놓기 때문에 토양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중금속 검출 시험 방법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새만금에 반입된 제강슬래그의 양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각종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애초 도로 보조 기층으로 재생 골재를 사용하게 돼 있었던 것이 ‘무료재’ 등의 이점을 안고 제강슬래그로 변경됐고, 저지대와 연약지반에 제강슬래그를 사용할 경우 반 도시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할 경우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놨지만 이도 준수되지 않았다.

또한, 일반 도로 건설 시 보조 층이 30cm 이내로 사용되는 데 비해 새만금 공사 현장에는 1m 이상의 높이로 쌓아 흙을 덧씌워 가려둔 것이 발견됐고, 곳곳에는 녹지 않은 철제 부속이 널브러져 있어 정상적인 처리 절차를 밟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은 한정에 환경부 장관에게 “이런 강알칼리성 새만금에 20년간 유입되는 것만 아니라, 20년 뒤 공유수면 잠문은 물론이 아니라, 원상복구를 할 때 폐기물 처리와 토양오염 정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문제”라며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잡고 제강슬래그를 모두 반출할 것인지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행사위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5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정치외교, 지방행정, 소방 주민자치, 인권 경제 분야로 전 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기현 교수, 군산대학교 행정학과 전영욱 교수,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정기성 교수, 전국주민자치협의회 정병래 공동대표, 지역경제교류회 홍순경 회장 등 총 6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는 디지털 정보 양극화 문제, 공공 갈등 공론화 사업, 다문화 종합복지 체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문승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들께서 도민을 대신해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위원회에 이입 없이 제시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면서 “앞으로 의정발전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책연구를 실시해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농사용 전기요금체계 개편 시급

최근 5년간 소송 총 22건… 농어업 현장 불필요한 갈등 초래



농촌융복합산업 등 6차 산업에도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원택 의원은 5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업은 1차 산업을 넘어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 산업으로 발전해가고 있는데도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이러한 농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9월)간 농촌융복합산업은 2016년 1,130개소에서 1,909개소로 약 60% 증가했고, 농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및 네트워크 조성, 인공영양체 지원 및 사후관리 등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741억원을 지원해 왔다.

농촌융복합산업의 확산과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들은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농촌

융복합산업 사업자와 한전간 소송에서 한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원택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9) 농사용 전력 관련 소송이 총 22건에 이르고 있다.

이 농사용 전기요금과 관련한 농어업 현장의 혼란과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농촌융복합산업법이 지난 2014년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개정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농촌융복합산업이 농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 점도 농촌융복합산업이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택 의원은 “제철·관광 등과 연계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의 제2차 산업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촌융복합산업 등 6차 산업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이 시급하다”며 “한전 전기기본공약의 농사용 전기요금 명칭을 농어업용 전기요금으로 수정하고, 농촌융복합산업 등이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한전 등이 시급히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